

4/ 고쿠민신문(国民新聞)에 나타난 3.1운동*

박은영



고쿠민신문(国民新聞),
1919년 3월 3일 자에 실린 '오늘 국장-
이태왕 최후의 사진'

박은영(朴銀瑛)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근대일본사상이며,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전통지식과 근대 이후 수용된 지식(사상, 종교) 문제를 겹쳐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상사적·젠더사적 관점에서 일본 여성의 사상 형성 문제를 연구 중이다. 논문으로는 "A Comparative Study on Acceptance and Distribution of Modern Medical Care in Japanese Colonies"(2018), 「근대 일본의 여성 '운동가' 간노 스가(菅野スガ)에 대한 일고찰」(2016)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스미토모재단(住友財団)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アジア諸国における日本関連研究助成, 助成番号: 178323).

<https://doi.org/10.29154/ILBI.2019.21.098>

1. 머리말

일본 신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1910년 8월 한국강제병합을 앞두고 최고조에 달했다. 각 신문들은 8월에 들어와 연일 병합을 둘러싼 각종 기사를 쏟아내면서, 동양 영원의 평화유지에 임하게 될 제국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 한국을 영구히 병합한다고 대서특필했다.¹ 그리고 8월 29일 조약이 정식으로 공포되자 신문들은 특별호를 발행하거나 축하 행사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관련 기사들이 지면에 등장했다. 실제로 이른바 ‘병합기’라고 부를 수도 있는 8월부터 그해 말까지의 몇 달 동안은 병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의는 물론 식민지 경영을 둘러싼 여러 정책들에 관한 기사들이 꾸준히 지면을 차지했다.²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며 일본 미디어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심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러한 식민지 조선을 ‘재발견’시킨 사건이 1919년 3.1운동이었다. 3.1운동은 오랫동안 조선에 무관심했던 일본 언론계의 관심을 일거에 환기했다.³

주지하듯이 당시 최대의 매스미디어는 신문이었다. 이 무렵 신문의 발행 통계를 볼 때 신문은 양적인 면에서 이미 정보 전달 기능의 역할을 가장 전문적이며 거의 유일하고 강력하게 수행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⁴ 즉

1 姜東鎭, 『日本言論界と朝鮮 1910~1945』, 法政大学出版局, 1984, 5~18쪽.

2 강동진은 이 시기(1910. 8~12)가 그 후의 무단통치기 8년, 3.1운동기 6개월, 문화통치기 10년, 파시즘통치기 14년에 비해 훨씬 신문 사설 수가 많았던 시기라고 지적한다. 강동진, 『일제언론계의 한국관』, 일지사, 1982, 13쪽.

3 당시 일본에서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한 『오사카아사히신문』은 1913년부터 1918년까지의 6년간 ‘사설’에서 조선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불과 6회, 곧 1년 평균 1회에 지나지 않았으나 1919년에만 11회, 1920년에는 8회 등장했다. 松尾尊兌, 「大正デモクラシーと三・一獨立運動」, 『自由思想』 115号, 2009, 23쪽.

4 1919년 9월 1일 자 『아카』(赤)지에 발표된 ‘도쿄 신문잡지 인쇄고 일람표’를 보면, 도쿄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으로 언급된 매체는 전부 17종인데, 이를 합하면 도쿄에서만도 169만 7,000부 이상 일간지가 나온 셈이다. 발행부수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아카』는 이 외에 소규모 신문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매체	東京日新聞	報知新聞	国民新聞	東京朝日新聞	東京毎夕新聞	時事新報	万朝報	やまと新聞	中外商業新聞
부수	29만 부	28만 부	22만 부	19만 부	12만 부	11만 부	10만 부	7만 부	7만 부
매체	都新聞	中央新聞	読売新聞	東京毎日新聞	二六新報	東京夕刊新報	大勢新聞	帝國新聞	합계(총17종)
부수	6만 부	6만 부	5만 부	3만 부	2만 부	1만5천부	8천 부	4천 부	1,697,000

대다수의 일본인은 신문 보도를 통해 식민지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와 정보를 얻었기에, 결국 일본 사회가 조선에 대해 형성한 이미지는 여러 언론 매체의 다양한 보도를 통해 만들어지고, 증폭되고, 축적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여기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측의 적극적인 의도와 목적성이 더해질 때 그 매체가 제공하는 이미지는 더욱 명확한 형태로 각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문의 식민지 조선과 조선인 보도의 문제를 확인하는 작업은 일본 사회의 조선 인식의 본질, 나아가 제국 일본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 또는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이다.

일본이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을 시작한 이래 10여 년 만에 일어난 3.1운동은 식민 통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일본 당국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신문들은 정부와 군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동일한 취지의 사설을 게재하는 등 사태의 추이에 끌려갔고, 조선의 현실을 충분히 전달하기보다는 자극적인 표제를 단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했다.

지금까지 3.1운동에 대한 일본 언론의 인식에 대해서는 신국주, 강동진의 선구적 연구 이래 몇 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는데,⁵ 사료의 제약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자료집 발간⁶은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이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⁷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⁸ 이상의 연구는 대

- 5 신국주, 「3.1운동과 일본 언론의 반향」,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강동진, 『일제 언론계의 한국관』; 姜東鎭, 『日本言論界と朝鮮 1910~1945』. 신국주의 논문은 주로 각 신문, 잡지의 보도 내용을 소개한 일종의 사료 소개적 성격이 강한 글로 이후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3.1운동을 연구 함에서 자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외에 이동초, 「3.1운동과 일제언론의 논조에 관한 연구」, 『신인간』 619~621, 2002; 이규수, 「3.1운동에 대한 일본 언론의 인식」, 『역사비평』 62, 역사비평사, 2003 등이 있다.
- 6 지금까지 총 4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일본신문 한국독립운동기사집(I) 3.1운동편(1)大阪朝日新聞』(2009), 『일본신문 한국독립운동기사집(II) 3.1운동편(2)大阪毎日新聞』(2009), 『일본신문 한국독립운동기사집(III) 3.1운동 영향편 大阪毎日新聞』(2012), 『재팬 에드버타이저 3.1운동 기사집』(2015). 다만 이 자료집은 수집한 신문 자료를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원문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각 권 뒷부분에 원문이 사진형태로 실려있기는 하나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I~III권). 또한 필자가 I~III권의 자료집을 확인한 바로는 날짜 표기의 오류가 산견되며, 간혹 기사의 누락도 보인다.
- 7 윤소영, 「일본신문자료를 통해 본 3.1운동: 『오사카아사히신문』과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을 중심으로」, 『유관순연구』 20, 2015; 김승태, 「『재팬 에드버타이저』의 3.1운동 관련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체로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일본 언론은 왜곡된 ‘보도’를 통해 3.1운동을 일부 종교지도자의 음모, 외국인 선교사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축소하고, 운동에 참가한 조선인을 폭도나 폭민으로 규정하는 등 3.1운동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 급급했고, 둘째, 운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언론은 기존 ‘논조’를 수정하여 3.1운동의 발생 원인을 총독정치의 폭압성에서 찾고 식민지 통치정책의 변화를 제언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식민지의 안정적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3.1운동 전개에 따른 일본의 대처 양상과 언론 보도상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도 노정했다. 우선 대부분의 연구가 3.1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도를 대상으로, 시기적으로는 운동의 발발, 전개, 심화, 진압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주로 3~4월에 한정하여 논했다는 점이다. 또한 매체적 특성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즉 매체와 상관없이 보도 양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본 것으로, 이 경우 각 매체의 특성과 보도의 본질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매체의 성격을 고려하는 것은 거기에 나타난 보도 자체나 논조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매체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광의의 논조, 예컨대 지면의 분위기 등까지도 검토와 분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고쿠민신문』(國民新聞)⁹에 나타난 3.1운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쿠민신문은 당시 도

54, 2016; 윤소영, 「3.1운동기 일본신문의 손병희와 천도교 기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2017.

8 다만 국내의 전체 3.1운동에 대한 엄청난 연구 성과에 비하면 일본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디어에 나타난 3.1운동 문제를 전면에서 내세운 것으로는 다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山中速人, 「三·一獨立運動と日本の新聞: 『事件』報道の経過と論調分析」, 『新聞学評論』 30号, 1981; 田中美智子, 「3.1運動と日本人: 日本国内の新聞報道をめぐっ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1号, 1984; 浅野健一, 「不逞の暴徒と決め付けた日帝メディア: 韓国三·一運動はどう報道されたか」, 『評論·社会科学』 58号, 1998; 宮地忠彦, 「大正期後半の新聞記事における朝鮮人の描かれ方の展開」, 『立教大学大学院法学研究』 23号, 1999.

9 이하 매체 표기 시에 사용하는 ‘『』’ 표시는 첫 번째 등장할 때만 사용하고, 반복 등장할 경우 생략했다.

료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부수(22만 부)를 자랑하던 일간지였음에도 4위인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19만 부)이나 7위의 『요로즈초호』(万朝報, 10만 부)보다도 훨씬 적은 조선 관련 기사수를 보였다.¹⁰ 그러나 보도 내용을 검토하면 출현 빈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고쿠민신문만의 보도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고쿠민신문이 3.1운동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질적 내용분석을 행하고, 동시에 거기에서 생산된 조선관련 지식의 의미를 매체와의 관련성에서 검토하는 것을 통해 신문의 성격까지도 확인하려고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쿠민신문이라는 특정 매체가 일본 사회에 형성한 조선상을 확인한다는 의미는 물론이며, 정부와 밀착한 언론기관으로 알려진 고쿠민신문이라는 매체의 문제에도 주목하여 이 신문이 가진 네트워크와 정보력 등이 3.1운동 보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을 통해 당시 일본 언론사회의 한 동향을 조명하고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한 3.1운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나아가 일본 정부의 조선인식을 이해하는 데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와 고쿠민신문

고쿠민신문은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가 1887년 잡지 『고쿠민노토모』(國民之友) 발행에 성공한 후 1890년 2월 1일 창간한 일간신문이다. 고쿠민신문과 다른 신문을 비교하여 고쿠민신문의 특이점을 “도쿠토미 소호와의 불가

10 다음은 3월 한 달 동안 보도된 조선 관련 전체 기사수와 3.1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수를 정리한 것이다. 3.1운동에 관한 보도가 시작된 이후의 조선 관련 기사는 대체로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고종 장례와 관련된 기사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사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의 3.1운동 관련 기사를 검토할 때 직접적인 보도 기사 외에도 조선과 관련한 기사 전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国民新聞	東京朝日新聞	万朝報	都新聞	読売新聞
조선 관련 전체 기사 수	40	90	54	53	66
3.1운동 직접관련 기사 수	23	63	37	34	30

분(不可分), 불리(不離)의 관계”¹¹라고 평가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쿠민신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소호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고쿠민신문의 창간자이자 경영자, 그리고 ‘필정’(筆政)을 쥐고 있던 소호와 그의 신문에 대한 자세를 이해하는 것은 신문의 분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²

소호는 고쿠민신문을 창간하며 몇 가지 점을 여타 신문과의 차이점으로 내세웠다.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뷰스페이퍼(viewspaper)로서의 신문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 소호는 다음과 같이 신문의 발행 목적을 밝혔다.

첫째는 사실을 회화로 보도하는 것이다. 초상을 게재하는 것도 그 하나이다. 둘째는 사실을 보도할 뿐만 아니라, 의견도 보도하는 것이다. 즉 뉴스페이퍼로서만이 아니라 뷰스페이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대화)가 제일작이다.¹³

주지하듯이 뷰스페이퍼는 최근에도 왕성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전문가의 분석과 해설, 전망을 담고 동시에 디자인 전략이 담긴 ‘보는 신문’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호는 시각적 자료가 가지는 효과에 주목하고, 어떤 문체에 따라서는 읽기보다 한 컷의 그림을 보는 것이 빨리 이해될 수 있다고 여겼다. 창간 당시 가장 공을 들여 초빙한 사람이 다름 아닌 교토 화단에서 활약하던 구보타 베이센(久保田米僊)이었던 것에서 소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¹⁴ 소호는 아직 사진판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삽화를 통해 사건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11 岩井肇, 『国民新聞の興亡とその評価』, 『政経研究』 6卷1号, 日本大学法学会, 1969, 34쪽.

12 도쿠토미 소호는 1890년 고쿠민신문의 창간 이후 1929년 1월 5일 퇴사할 때까지 경영[1926년 5월부터는 네즈 가이치로(根津嘉一郎)와 공동경영]과 지면전체를 통괄하는 최고책임자였다.

13 徳富蘇峰, 『老記者叢話』, 東京民友社, 1930, 306~307쪽(猪飼隆明, 『『国民新聞』の歴史的評価をめぐって』, 『Kumamoto: 総合文化雑誌』 20号, 2017, 45쪽에서 재인용).

14 당시 사설기자 월급이 30원이었던 데 비해 구보타 베이센의 월급은 100원이었다. 小野秀雄, 『日本新聞發達史』, 大阪毎日新聞社, 1922, 215쪽.

또한 사설의 단축을 내걸었던 점도 흥미롭다. 소호는 종래의 긴 논문 형식을 폐지하고 장단을 자유자재로 하는 한편, 다양한 시사문제를 취재할 것을 요청했다.¹⁵ 고쿠민신문의 사설이 여타 신문에 비해 현저히 간략한 반면, 외부 투고자 글이나 명사 인터뷰 기사는 길게 실렸던 것은 뷰스페이퍼를 지향한 고쿠민신문의 특징이었다.

물론 언론인 소호가 세상을 교도하는 것을 뚜렷한 목적으로 내세웠던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소호는 창간 당초부터 고쿠민신문이 다루는 범위를 정치, 경제, 종교, 문학, 예술 등 모든 사회문제로 확대하여 신문이 모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기를 바랐고, 구체적으로 정치, 사회, 문예, 종교 네 방면에서의 '개량'을 달성하는 것을 신문의 목적으로 내걸었다.¹⁶ 이 중에서 소호의 최대 관심사는 정치 개량이었고, 창간 초기 평민주의의 입장에서 번벌세력, 사족층 중심의 정치에 대해 엄격한 대결의 자세를 취했던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삼국간섭 문제를 계기로 제국주의적 대외팽창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국가주의자로서의 입장을 취하게 된 소호는 국권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며 정권에 접근했다.¹⁷ 특히 가쓰라 다로(桂太郎)를 비롯한 유력정치가,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용언론인으로 불렸고, 고쿠민신문은 어용신문으로 불리는 등 정부계 신문의 대표적 존재가 되었다. 실제로 고쿠민신문은 러일전쟁이 종결될 때 정부 편에 서서 강화조약을 적극

15 小野秀雄, 『日本新聞發達史』, 216쪽.

16 岩井肇, 「國民新聞の興亡とその評價」, 39~40쪽.

17 이 때문에 소호를 두고 언론인으로서 반권력적 측면이 강했던 초창기 모습에서 청일전쟁을 계기로 '전향' 또는 '변질'한 것으로 평가하거나(岩井肇, 「國民新聞の興亡とその評價」, 41쪽; 鄭大成, 「德富蘇峰テキストにおける「朝鮮」表象: 日本型オリエンタリズムと植民地主義」, 『일본언어문화』 5, 2004, 292쪽; 이태진, 「요시다 쇼인과 도쿠토미 소호: 근대 일본 한국 침략의 사상적 기저」, 『한국사론』 60, 2014, 554쪽), 권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강화하고자 한 '문제적 인물'로 평가하기도 한다(송석원, 「도쿠토미 소호와 '전쟁': '대일본팽창론'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50, 2011, 198쪽). 그러나 정작 소호 자신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입장을 바꿀 때마다 내 의견이 바뀌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렇지만 실은 나는 의견에 따라 입장을 바꾼 일은 있어도, 입장에 따라 의견을 바꾼 일은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아직 어떠한 변명을 시도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며 변질자로 평가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德富蘇峰, 『時務一家言』, 277~278쪽(猪飼隆明, 「『國民新聞』の歴史的評價をめぐって」, 47~48쪽에서 재인용).

찬성하다가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방화로 사육이 불타기도 했다. 또한 1913년 헌정호헌운동에서도 제3차 가쓰라 내각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여 재차 호헌과 민중의 습격을 받는 등 고쿠민신문은 자타가 공인하듯 정권에 매우 밀착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소호 스스로도 “제국적으로 국민을 지도하려 하는 가쓰라 공의 쾌거에 나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찬익했다”고 공언하고 있었다.¹⁸

이후로도 고쿠민신문은 상황에 따라 부수의 감소와 회복을 반복하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신문상(像)’, 곧 고쿠민신문의 언론활동, 지면 전체의 편집과 경영은 소호 한 사람에게 의해 체현되고 있었고,¹⁹ 그의 언론활동에서 일본을 세계 일등국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중심주의적 사고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²⁰

한편 1910년 한국병합이 단행된 후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의 요청으로 조선에 건너간 소호는 총독부 기관지 운영에 관한 약정을 맺고 『경성일보』의 경영과 인사권을 통솔하는 감독이 되었다. 소호는 1910년 10월부터 1918년 7월 사임까지 약 8년간 경성일보의 최고책임자로서 총독부의 언론정책 및 데라우치의 식민통치에 영향을 미쳤다.²¹ 소호는 한국의 병합을 팽창주의적 국가주의의 당연한 귀결로 보았다.²² 나아가 일본의 제국주의가 목표로 내건 동양 평화를 위해 식민지에서의 일본의 지배력 강화는 중요한 문제였다.²³ 따라서 소호에게 식민지 조선에 필요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18 有山輝雄, 「大正期における『国民新聞』と徳富蘇峰」, 『成城文芸』 119号, 1987, 130쪽.

19 당시 대부분의 유력 신문사들은 기업화가 진행하여 점차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변모해나갔고, 경영은 경영자가 언론과 편집은 전임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체제가 일반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쿠민신문만은 여전히 소호의 개인경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岩井肇, 『国民新聞の興亡とその評価』, 53쪽.

20 伊藤彌彦, 「徳富蘇峰は自分の人生をどう語ったか(1)」, 『同志社法学』 67卷7号, 2016, 15쪽.

21 소호가 이 기간 동안 경성에 체류한 날은 대략 1,800여 일로 집계된다고 한다. 이태진, 「요시다 쇼인과 도쿠토미 소호: 근대 일본 한국 침략의 사상적 기저」, 597쪽.

22 소호는 『경성일보』에 연재한 ‘조선통치의 요의’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병합은 우리들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물러날 수 없는 대세이다. … 조선병합은 일본민족의 처지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길이다.” 『경성일보』, 1910년 10월(방광석, 「徳富蘇峰의 동아시아 인식: 청일전쟁부터 한국병합 시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7, 2010, 268~269쪽에서 재인용).

23 송석원, 「도쿠토미 소호와 ‘전쟁’: ‘대일본팽창론’을 중심으로」, 209~210쪽.

질서이고, 언론이 아니라 실행이며, 종론방의(縱論放議)한 다두정치(多頭政治)가 아니라 엄정공평(嚴正公平)한 통일정치였다.²⁴ 여기서 소호가 말하는 ‘통일정치’란 강력한 총독정치, 곧 무단통치를 의미한다. 소호는 1912년 조선을 여행한 후 남긴 「조선의 인상」(朝鮮の印象)이라는 짧은 기행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헌병이) 거의 인민의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되었다. … 천황 폐하의 인정(仁政)을 펼치는 것은 조선총독이고, 또한 총독의 의지를 실지(實地)에서 인민과 접촉하여 행하는 것은 저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⁵

소호는 데라우치 총독의 헌병경찰제도를 극구 찬양하며, 마치 민중을 돕는 ‘인정’의 첩병으로 그리고 있었다. 총독부의 무단통치를 ‘선정’(善政)으로 ‘선전’(宣傳)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인 소호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청일전쟁 무렵부터 시작된 데라우치와 소호의 친교는 경성일보 운영을 통해 한층 극대화되어 총독부와 강한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더욱이 소호는 경성일보 감독이 된 후 고쿠민신문의 기자와 경영자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경성일보에 깊이 관여하게 하였으므로, 고쿠민신문으로서 는 일찍부터 조선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호의 추천으로 1914년 8월 요시노 다자에몬(吉野太左衛門)의 후임으로 사장에 취임한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고쿠민신문에서 소호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1918년 7월 소호와 함께 사장직을 그만둘 때까지 4년여의 재임기간 동안 조선의 귀족, 문인, ‘신지식층’, 종교계 인사 등 유력층과 교류하며 조선인과 조선사회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 시대의 이른바 ‘제국의 브로커’, ‘비정식접촉자’로서 조선통치에 깊이 관여하였다.²⁶

24 德富猪一郎, 『兩京去留誌』, 民友社, 1915, 268쪽.

25 姜東鎮, 『日本言論界と朝鮮 1910~1945』, 138쪽.

26 아베 미쓰이에에 대해서는 이형식의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우선 경성일보 사장 재임 시의

소호는 자신의 친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표명한 바 있었다.

나는 본래 정치를 좋아하고, 정치는 나의 생명이었다. 그렇지만 당초부터 관리가 되겠다는 생각은 일절 갖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당초부터 대신(大臣) 희망자도 의원(議員) 희망자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세상 속의 정치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이끌기를 바라는 것까지로, 그 외에는 하등의 교묘한 마음, 명예심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대단히 미력하지만 세상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끌려는 뜻은, 만일 이것을 야심이라고 말한다면 그 야심은 불타올랐다.²⁷

그리고 본래 정치를 좋아하는 소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언론인의 길이었다. 자기 자신이 정치가나 관료가 되지는 않지만 저들을 움직이고, 세상을 교도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움직이기 위한 무기가 자신의 언론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소호와 고쿠민신문의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고쿠민신문이 3.1운동과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3.1운동 보도의 성격

1) '독립'을 요구한 조선인

3월 3일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을 통해 처음으로 3.1운동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각 신문들은 연일 전면적인 보도와 논평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전면적인 보도라고 하기에는

아베 미쓰이에 대해서는 「경성일보: 매일신보 사장시절(1914. 8.~1918. 6.)의 아베 미쓰이에」(『사총』 87, 2016)을, 사이토 총독 부임 후의 행적에 관해서는 「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와 문화통치」(『역사문제연구』 37, 2017), 「1920년대 중후반 아베 미쓰이에의 조선에서의 정치 행보」(『민족문화연구』 78, 2018)를 참고할 것.

27 徳富猪一郎, 『蘇峰自伝』, 中央公論社, 1935, 224~225쪽.

대부분의 신문들이 비슷한 보도 양태를 보였다는 점은, 전술했듯이 정부와 군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당시 언론의 ‘종속적’ 보도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도쿄아사히신문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보자.

3.1운동을 처음으로 보도한 도쿄아사히신문의 3월 3일 자 「불온한 격문 배포」라는 기사를 보면, 국장을 앞두고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격문을 배포하자 경무총감부는 신속하게 활동을 개시했다는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누락한 채 일본 측의 신속한 대응을 알리는 기사를 발신했다.²⁸ 그리고 4일 자 「선인(鮮人)의 운동」, 「경성의 대행렬」, 「수모자 32명 인치」, 7일 자 「조선 각지의 폭동」, 「학생 검거 400명」, 「진남포의 소요」, 「선동자 포박」, 「소년대를 선두로 시위」, 「사천, 성천에 봉기」 등 정부의 일정한 보도 통제 가 이루어진 3월 14일 전후까지 엄청난 양의 ‘소요’와 ‘폭동’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도 운동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²⁹ 더욱이 13일 자 「조선소요의 선후」라는 장문의 사설에서조차 총독정치의 개선을 바란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운동의 근본적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천도교, 개신교계의 음모, 무지한 선민(鮮民)의 선동이라는 점만 밝히고 있었던 것에서 도쿄아사히신문의 보도 양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고쿠민신문의 보도는 매우 흥미롭다.

고쿠민신문의 3.1운동에 대한 첫 보도는 3월 7일 「조선학생단의 폭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시작되는 5면 대부분을 사용한 ‘경성전보’ 기사들을 통해서이다. 우선 <그림 1>을 통해 전체 지면을 확인해보자.

<그림 1>에 표기한 숫자는 필자가 기사 배열 순서에 따라 순번을 매긴 것이다. 이들 기사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① 국무대신 총대로서 국장에 참여한 노다(野田) 체상(遞相, 체신대신)의 사진, ② 조선학생단의 폭동, ③ 160만 천도교도는 야소교도의 사주를 받고 있다, ④ 제복을 벗어던지고, ⑤ 악랄한 야심교, ⑥ 비밀출판물을 배포하는 운동의 손은, ⑦ 미국인이 경성에 들

28 「不穩な檄文配布」, 『東京朝日新聞』, 1919년 3월 3일, 5면.

29 도쿄아사히신문의 경우 3월 3일 첫 보도 이후 3월 14일까지 직접적인 보도만 해도 약 45건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림 1〉 고쿠민신문 1919년 3월 7일 5면

출처: 필자 촬영(본문의 모든 그림은 필자가 직접 신문을 촬영한 것으로 이하 출처 생략)

어울 때 온 자도, 마지막 ⑧번 기사는 ‘눈물을 금할 수 없다’는 제목의 청량리 노제에서 찍은 ‘이왕’(李王)의 사진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③번 기사는 노다 체신대신과의 인터뷰로 이루어진 기사이고, ①, ⑧번 사진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3.1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기사이다.

먼저 이 지면을 보는 독자 누구라도 열차 침대간에 올라 환하게 웃고 있는 노다 체상의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문의 지면 구성이 보도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 배치된다고 할 때, 상단 첫 번째 위치에 저 정도의 사이즈로 노다 체상의 사진이 배치된 것은 무척이나 어색하게 여겨진다. 신문편집자에게 고종 장례식의 직접 당사자인 순종의 슬픔에 잠긴 모습보다 장례식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노다 체신대신의 소식이 중요했다는 것인가. 이 지면의 전체 논조를 이해하기 위해 나머지 기사들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고쿠민신문은 3.1운동의 의미를 정확히 파

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②번 기사는 ‘조선학생단의 폭동’이라는 표제 옆에 큰 글씨로 “대오를 짜서 경성에 몰려들다. 한국 독립을 절규하며(밑줄 필자, 이하 동일) 우리 관헌과 충돌하고 붙잡힌 자는 백 명에 이른다. 형세가 점점 중대하여 군대 출동”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④번은 “제복을 벗어 던지고, 전도(全道)의 학생들 모두 독립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다”라고 적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 외의 기사에도 ‘독립운동’, ‘독립선언서 발표’, ‘조선 각지에서 발발한 독립 대(大)시위운동’ 등 모든 글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며 3.1운동을 보도하고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신문들은 3.1운동을 ‘소요’, ‘폭동’, ‘불온’ 등으로만 보고 전혀 ‘독립’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시기 보도의 일반적 특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다.³⁰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3월 3일 ‘조선 경성의 불온’이라는 표제의 3.1운동에 관한 최초의 보도 기사를 게재했던 도쿄니치니치신문도 독립운동이라는 말은 일절 언급하지 않다가 ‘조선독립운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표제에 등장시킨 때는 5월 18일이었다.³¹ 또한 전술한 도쿄아사히신문도 마찬가지였으며, 오히려 일본 당국의 검열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사도 있다.

〈그림 2〉 기사의 첫 번째 줄 ‘조선 ○○의 선전운동’이라는 부분에 들어갈 말은 ‘독립’일 것이다. 이와 같이 3.1운동 발생에 대한 일본 언론 보도가 조선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시에 그러한 보도밖에 할 수 없었던 당시 신문의 비자발적, 비독립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3.1운동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측면을 전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3.1운동과 운동의 주체인 조선인에 대해 불완전한 ‘조선상’이 보도되던 상황에서, 고쿠민신문은 가장 정확하게 식민지 조선인의 ‘독립’ 의지를 적시했다

30 田中美智子, 「3.1運動と日本人: 日本国内の新聞報道をめぐって」, 185쪽. 필자가 확인해본 바로는 ‘독립신문’ 등과 같이 고유명사적으로 사용된 소수의 용례를 제외하고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지양되고 있었던 상황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3.1운동에 대한 첫 보도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신문은 찾을 수 없다.

31 浅野健一, 「不逞の暴徒と決め付けた日帝メディア: 韓国三・一運動はどう報道されたか」, 126쪽.



(그림 2) 도쿄아사히신문 1919년 4월 30일 3면

고 볼 수 있다.³²

한편 5면의 사진을 제외한 6개의 기사 중에 노다 체상과의 인터뷰를 실은 ③번 기사만은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전혀 ‘독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독립의 노래, 만세를 부르는 군중의 목소리가 노다 체신대신의 귀에는 그저 ‘와-와-’라는 외침으로 들렸다고 기술한 부분이나, 병합 이후 조선은 풍요로워졌으며 어느 곳이나 불평하는 무리는 있기 마련이라고 말하며 ‘흥소’(哄笑)했다고 적은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다시 환하게 웃고 있는 노다 체상의 사진으로 돌아가보자. 사진은 지면에 생동감과 활력을 주는 중요한 시각요소이다. 따라서 어떤 사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한 사진의 크기에 따라서도 그 지면의 인상이 크게 달라지며, 정보 전달 효과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지면은 3.1 운동에 대한 고쿠민신문의 첫 보도가 등장한 지면이다. 그렇다면 이 지면의 전체적인 논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적어도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쿠민신문은 3.1운동의 의미, 곧 조선인의 ‘독립’ 요구를 정확히

32 고쿠민신문 역시 3월 말에 가면 ‘독립’이라는 단어가 기사에서 차츰 감춘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³³ 여기에는 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긴 시간 활동했던 소호와 경성일보, 그리고 고쿠민신문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정보력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비록 3.1운동이 발발했지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안도감을 준다는 점이다. 즉 이 지면의 기사 구성과 표제, 사진 등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논조는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고쿠민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이 반영된 강한 여론 지도력을 의도한 보도 양태였던 것이다.

2) 식민지, 조선 왕실의 격하

소호가 시각적 자료의 효과를 중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3월 7일 5면의 노다 체상의 사진을 통해서도 신문지상의 사진 한 장이 직접적으로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진기사는 활자로만 이루어진 기사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며,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식민지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형성했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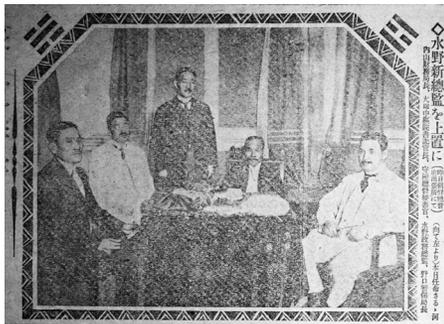
아래의 <그림 3>은 5면 하단에 나온 「눈물을 금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진기사이다. 사진 바로 밑에는 사진 제목이 있고, 다시 그 밑으로 ‘청량리 노제에서의 이왕(×표시)과 윤덕영(○표시)’이라는 사진 설명이 달려 있다. 필자는 이 사진이야말로 고쿠민신문의 조선인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단히 ‘자극적’인 시각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당시 대부분의 신문에서 사진 설명, 특히 인물(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방식은 중앙 혹은 왼쪽/오른쪽, 앞/뒤에서 몇 번째가 ‘누구’라는 형태를

33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일본 언론은 3.1운동에 대한 부정적 보도와 논조 변화를 겪으면서도 일관되게 조선인의 내재적 요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나(이규수, 「3.1운동에 대한 일본 언론의 인식」; 윤소영, 「일본신문자료를 통해 본 3.1운동: 『오사카아사히신문』과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을 중심으로」), 오히려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 3.1운동 발발 이전 일본 언론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심은 매우 희박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운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선에 관한 보도는 일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빈번하게 신문 지면을 차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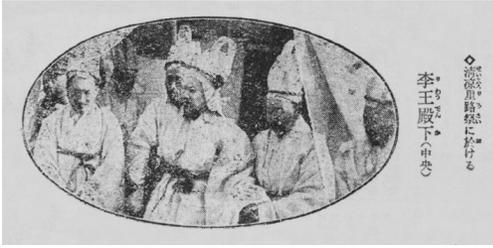
〈그림 3〉
고쿠민신문 1919년 3월 7일 5면(하단사진)



〈그림 4〉 고쿠민신문 1919년 8월 20일 5면 '정면 좌(左)로부터 본일 임명된 ~'
〈그림 5〉 고쿠민신문 1919년 8월 29일 5면 '상단[우(右)로부터 ... 사이토 신총독~'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쿠민신문의 다른 예(〈그림 4〉, 〈그림 5〉 참고)를 보아도 일반적인 형태로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고쿠민신문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아무리 사진이라고 해도 '이왕'의 몸에 직접 구별 표시를 한 점은 매우 '불경'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더욱이 'x' 표시이다. 신하인 윤덕영(尹德榮)에게는 'o' 표시를 했다. 우선은 x나 o라는 기호에 특정한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다른 신문의 사진 설명법과 비교해 사진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대부분의 신문들은



李王殿下中令
 李王殿下中令



李太王殿下國葬儀當日の光景
 (中央を擁り給ふ李王殿下なり)



李王殿下
 李王殿下
 李王殿下

〈그림 6〉 요로즈초호 1919년 3월 8일 2면(위, 왼쪽)
 〈그림 7〉 미야코신문 1919년 3월 6일 5면(위, 오른쪽)
 〈그림 8〉 오사카마이니치신문 1919년 3월 6일
 (3월 5일 석간) 6면(아래)

고종의 장례 소식을 전하며 상복을 입고 있는 순종의 모습이 담긴 여러 종류의 사진을 싣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흥미롭게도 고쿠민신문과 완전히 동일한 사진을 싣고 있는 몇몇 신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림 6〉은 요로즈초호에 실린 사진으로, 사진 옆 설명은 ‘청량리 노계에서의 이왕전하(중양)’이라고 달려 있다. 이어서 〈그림 7〉은 『미야코신문』(都新聞)의 것으로, 마찬가지로 사진 옆에 ‘이태왕전하 국장의 당일의 광경(중양 지팡이를 쥐고 계시는 분은 이왕전하이다)’라고 적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8〉은 이 동일한 사진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3월 6일(3월 5일 석간)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에 실린 사진인데, ‘이왕전하 함령전(咸寧殿)을 나가시려고 하다’라는 설명이 달려 있다.

일단 이상의 세 신문과의 비교를 통해 고쿠민신문 표기법의 특이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 이에 더하여 세 신문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전하’라는 호칭조차 고쿠민신문에서만 생략되어 있는 점도 알 수 있다. 사

실 상복 차림으로 부축을 받는 순종의 사진은 그 자체로 슬픔에 잠긴 조선을 형상화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설사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시각적인 효과를 충분히 전달해줄 수 있다. 이 사진이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사용되었던 이유도 필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근대 일본 신문 자료를 읽다 보면 기사 중간중간 공란으로 보이는 곳이 산견된다. 이를 자세히 보면 ‘천황’, ‘황후’를 비롯해 천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어 앞에 공란을 부여한 것으로, 천황은 신성하여 범할 수 없다는 대일본제국헌법 제3조의 지면상에서의 실천이었다. 그렇다면 고쿠민신문은 ‘이왕’의 몸에 직접 ‘X’표시를 붙여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격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입장을 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각 이미지는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기도 하다. 여기에 이미지를 제공하는 신문 측의 적극적인 의도가 더해질 때 더욱 명확한 형태로 각인되는 것은 물론, 신문의 논조를 대변해주는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다. 일본은 병합 당시 천황의 조서로서 대한제국의 구황실을 격하하여 이왕가(李王家)로서 황족(皇族)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여 양국 관계를 제도적 차원에서 ‘계층화’하였다. 고쿠민신문은 고종의 죽음으로 촉발된 조선 왕실에 대한 관심을 한 장의 인상적인 사진을 통해 일본사회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보여주는 형태로 일본사회 내부에 재차 각인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완전히 동일한 사진을 게재한 세 신문 어디에서도 주목하지 않은 ‘이왕’ 옆의 ‘윤덕영’을 굳이 구별 부호까지 사용하여 명시한 것은 총독부, 나아가 일본 정부에 협력적인 주목할 만한 인물을 일본 사회에 소개하려는 고쿠민신문의 의도와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실제로 윤덕영³⁴은 소호의 추천으로 경성일보 사장에 취임한 아베 미쓰이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아베 미쓰이에가 고쿠민신문의 가정박

34 윤덕영(1873~1940)은 당시 고종 국장에서 장의괘(葬儀掛)와 제관부장(祭官部長)에 임명되었던 인물로서, 병합 직후인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다음해 1911년 2월 이왕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왕직이 설치되자 찬시(贊侍)에 임명되어 1919년 10월까지 재임하였다.

람회를 답습하여 경성일보 주최로 개최한 1915년 9월 가정박람회에서 명예 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했고,³⁵ 조선귀족으로 이왕직의 소수의 유력한 조선인 간부였다는 점,³⁶ 1920년 이후로는 조선식산은행 감사로 장기간 활동하였으며, 1925년에는 총독 자문기구인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고쿠민신문으로서는 실로 직접적으로 가까운 조선인이었던 것이다.

3) 진압이 중요하다

3.1운동에 대한 소식이 일본 사회에 전해진 이후 신문들은 앞다투어 예기치 못했던 '사건'을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신문 보도의 전개는 시간적인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즉 3월 초에서 중반까지 위기의식을 고조하며 '폭동'과 '소요'의 격화 소식을 전했다면,³⁷ 3월 중반 이후 하순으로 가면서 '폭동'의 배경을 설명하거나 재외 조선인의 동향, 외국의 반응, 일본 정부 대응 등의 기사들을 본격적으로 게재하였고, 동시에 논조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다.³⁸ 흥미로운 것은 3월 말부터 4월 초 3.1운동이 가장 왕성하게 발생했던 시기에 일본 신문들은 '폭동'과 '시위'의 감소 혹은 쇠퇴, 정온 등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4월 4일 정부의 군대 증파병(增派兵)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증파병 소식을 전하는 고쿠민신문의 보도 양태는 조금 달라 보인다. 고쿠민신문 4월에 게재된 조선관련 기사수를 보면 총 21개였는데, 이 중 4월 7일 2면 「조선소요진압」, 동 2면 「진압방침결정」, 9일 2면 「진무방침결정」, 5면 「진압의 대책 정하다」, 동 5면 「양민보호를 위해: 육군당국의 증병설명」, 10일 4면 「조선과견병출발」의 6개 기사가 '진압', '파견', '증병' 등을 <그림 9>에서 보듯이 큰 표제로 보도하고 있었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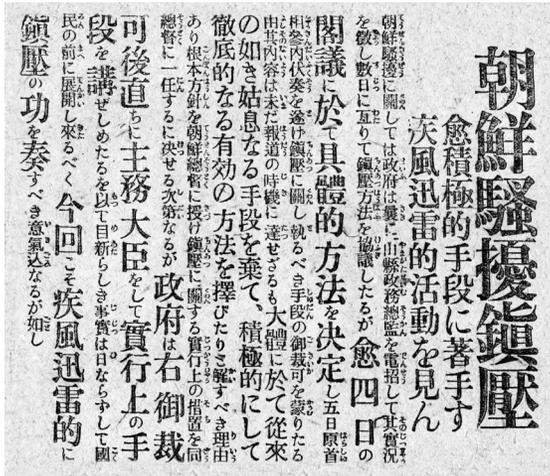
3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윤택영' 검색)

36 장신, 「일제하 이왕직의 직제와 인사」, 『장서각』 35, 2016, 93쪽.

37 田中美智子, 「3.1運動と日本人: 日本国内の新聞報道をめぐって」, 183~186쪽.

38 山中速人, 「三・一獨立運動と日本の新聞: 「事件」報道の経過と論調分析」, 259~260쪽.

39 물론 증병문제를 정면에서 비판하는 신문은 전혀 없었다. 다만 4월 총 49개라는 많은 수의 조선관련 기사가 실렸던 도쿄아사히신문의 경우, 표제에 '진압'이라는 말을 쓴 기사는 하나도 없으며, 운동 진



〈그림 9〉 고쿠민신문 1919년 4월 7일 2면

이것은 고쿠민신문이 다른 신문과 달리 정부 방침을 매우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큰 불안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고쿠민신문은 3월 30일 「조선통치의 요(要)」라는 사설에서 “느슨하면 기어올라오고, 꾸짖으면 쪼그라드는 것은 선인의 통유성(通有性)”⁴⁰이므로, 혹시라도 때를 놓쳐 식민통치의 기초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당국자에게 진압방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었다.⁴⁰ 〈그림 9〉 역시 “중래와 같은 고식적 수단을 버리고, 적극적이고 철저하고 유효한 방법을 택”할 것을 말하며, ‘질풍뇌전’(疾風雷電)적 진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강력한 진압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 4월 27일 자 「토민(土民)의 불평과열」⁴¹이라는 기사에서는 영국의 위압적 무위(武威)정책의 결과 인도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일본은 영국과 달리 조선을 ‘온유 평화’한 수단으로 통치한다는 가노코기 가즈노부(鹿子木員信)의 인터뷰를 신고 있

압을 위해 과건되는 병력에 관한 기사는 4월 9일 3면에 「조선에 병력증과」, 「조선증병사정」, 10일 4면 「과선부대출발」이라는 기사뿐이다. 요르즈초호의 경우도 4월에 총 55개의 조선관련 기사 중 4월 9일 「조선에 병력증과」, 「증병이유」, 「조선소요진압을 위해 6개 대대를 파견」과 10일 「조선에 증과 병」이라는 4개의 기사뿐이다. 이 외 다른 신문들도 대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40 「朝鮮統治の要」, 『国民新聞』, 1919년 3월 30일, 2면.

41 「土民の不平破裂」, 『国民新聞』, 1919년 4월 27일, 5면.

다. 이 또한 정부의 식민정책을 옹호하는 고쿠민신문의 논조와 매체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가노코기 역시 소호와의 인연이 깊은 인물로, 이후 전쟁기에는 소호가 회장을 맡고 있던 대일본언론보국회의 전무이사, 사무국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국수주의사상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식민지 조선에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크게 염려할 바 아니라는 고쿠민신문의 3.1운동 첫 보도와 달리 이후 조선에서의 독립 운동은 점차 격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쿠민신문은 정부의 식민지 통치방침의 실패를 비판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한 다른 신문들과 달리 시종일관 정부를 옹호하고 철저한 탄압과 강력한 진압을 주장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병합 이래 대조선정책의 기본이었던 ‘내선융화’, ‘동화주의’ 정책에 비판적 논조를 보이던 여타 신문들에 대한 고쿠민신문의 입장이다.

4월 21일 자 「아 조선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고마쓰 미도리(小松緑)의 글은 본래 강력한 동화정책을 지지하던 고쿠민신문의 자세를 잘 대변해준다. 고마쓰는 한국의 병합 계획에도 참여했고 총독부 중추원 서기관장을 지냈던 인물로, 그는 “조선을 남해도(南海道)로 고쳐 여기에 군현제를 실시하고, 조선인에게도 징병령을 적용함과 동시에 제국의회 의원인 되는 자격을 주는 것을 일책(一策)으로 해야 한다.”⁴²라고 말하며 조선을 지방자치의 한 단체로 간주할 것을 요청하였다. 즉 고쿠민신문은 조선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더욱 완전한 동화를 바탕으로 한 일본과의 적극적인 ‘정치적 일체화’를 주장했고, 그것이야말로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러시아혁명 이후의 과격파 사상의 확산 문제와 파리강화회의의 결과에 국가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발한 3.1운동은 일본의 사명을 ‘동아 평화의 옹호자’, ‘동아 여러 민족의 선도자’⁴³로 확신하던 소호에게 식민

42 小松緑, 「噫朝鮮を如何せん」, 『国民新聞』, 1919년 4월 21일, 3면.

43 徳富猪一郎, 『大戦後の世界と日本』, 民友社, 1920, 764쪽.

지 지배의 위기만이 아니라 중국과 만주에서의 세력 확대를 노리던 제국 일본의 위기를 환기시킨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제국의 위기

육군성이 작성한 보고문서에 따르면 “5월 이후는 전 도(道)가 표면상 대개 정온하여 한두 곳을 제외하고 소요로 볼 만한 것을 볼 수 없는”⁴⁴ 상황이었다. 이 보고가 얼마만큼 정확한지 혹은 허위의 보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신문들의 보도기사를 보면 3~4월과 같은 직접적인 3.1운동 관련 기사가 사라지고, 동시에 이 자리를 총독 후임인사나 관제개정에 대한 기사가 대신하고 있다. 곧 일본의 신문들은 4월 말을 경과하며 “조선 문제에 관해 일방적으로 일단 중지부를 찍었다”⁴⁵고 평가될 정도로 운동에 대한 보도를 중단한 것이다. 지금까지 3.1운동에 대한 일본 언론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가 대체로 3~4월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이러한 보도 전개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 보도 양태와 달리 실제로 3.1운동은 1919년 내내 조선 각지에서 계속되었다. 그런 점에서 고쿠민신문의 5월 3일 자 「조선의 선후(善後)」라는 간결한 사설은 3.1운동의 의미와 중대성을 재차 환기하고, 일본의 안전을 위해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압적 수단으로 표면은 어쨌든 진정된 것 같지만, 내부의 악성화는 우리의 예상 이상이다. 이번에는 외과 치료를 한 것으로, 병은 생각보다도 심각하게 내부에 퍼져있어, 다수의 선민에게 극단적인 악감정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즐지에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철저한 선후책을

44 「朝鮮騷擾經過概要(大正八年九月陸軍省印刷)」, 近藤鈿一 編, 『万才騷擾事件(三·一運動)(1)』, 巖南堂書店, 1964, 27쪽.

45 田中美智子, 「3.1運動と日本人: 日本国内の新聞報道をめぐって」, 195쪽.

하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외치지 않을 수 없다.⁴⁶

이 사실이 발표되고 4일 후인 5월 7일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의 「제국의 위기」라는 글이 연재된다는 「예고」 기사가 신문지상에 등장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5월 8일 「(1) 일본의 실력」이라는 글로 시작하는 이 연재기사는 6월 17일 「(41) 결론」까지 총 41회에 걸쳐 게재되었다.⁴⁷ 즉 3.1운동 발발 원인을 무단통치, 동화주의에서 찾으며 식민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른바 기술적 개량이라는 방향으로 논조를 수렴시켜나갔던 다른 신문들에 비해, 고쿠민신문은 3.1운동으로 촉발된 일본 제국 전체의 위기를 논함으로써 직접적인 정부 비판 대신 정부 옹호의 논조를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연재기사는 외부 전문가의 분석을 신신한다는 전술한 소호의 ‘뷰스페이퍼’로서의 신문상이 잘 반영된 기획이기도 했다.

이 글의 저자인 오타니 고즈이는 조도신슈(浄土真宗) 혼간지파(本願寺派) 제22대 법주로 교단의 정점에서 근대화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 전도활동에도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1914년 혼간지의 재정문제에 책임을 지고 법주를 사임한 이후로도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롭게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폭넓게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오타니를 지탱했던 것은 바로 소호였다.⁴⁸ 오타니는 법주 사임 이후 ‘제국의 상담역’이 되어 대만, 남양군도

46 「朝鮮の善後」, 『国民新聞』, 1919년 5월 3일, 2면.

47 이 연재기사는 같은 해 8월 소호의 민우사(民友社)에서 단행본으로도 간행되었다. 연재된 기사와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5월 7일 「予告」, 6월 17일 「(41) 結論」으로 끝난다(굵은 글씨는 조선관련 기사).

(1) 日本の實力	(2) 國家と領土	(3) 公正の待遇	(4) 虎と狐
(5) 我が商工業	(6) 食糧問題(上)	(7) 食糧問題(下)	(8) 造酒制限論
(9) 鹽田と肥料	(10) 肥料の三要素	(11) 過激主義	(12) 不平と不足
(13) 衣食難	(14) 學者と當局	(15) 開墾の餘地	(16) 蘭領印度
(17) 好植民地	(18) 北進南進	(19) 官僚の弊	(20) 徵兵制度(上)
(21) 徵兵制度(下)	(22) 朝鮮暴動	(23) 民族自決	(24) 朝鮮の統治
(25) 油斷大敵	(26) 鮮民を向上せしめよ	(27) 臺灣の統治	(28) 臺鮮同化
(29) 對支外交	(30) 國恥	(31) 靑島還付	(32) 支那の國恥
(33) 米支親善	(34) 支那漫遊者	(35) 偉人の出現	(36) 對支策眼目
(37) 親善と實力	(38) 王者の道	(39) 個人の自由	(40) 國家主義と個人主義

48 소호와 오타니의 관계에 대해서는 240여 통에 달하는 서간을 중심으로 연구한 高野静子, 『蘇峰とその時代』, 中央公論社, 1989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림 10〉 고쿠민신문 1919년 5월 29일 3면

를 중심으로 한 여러 농장과 북쪽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사할린 지역까지 폭넓게 활동했다. 곧 제국 일본의 영광,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선은 물론, 만주, 중국, 나아가 아시아까지 뻗어나가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타니에게 일본의 조선 지배는 소호와 마찬가지로 제국의 필연적인 대세였고, 조선 통치는 오히려 총독의 ‘선정’으로 보였다.⁴⁹ 소호는 「제국의 위기」 이전에도 오타니의 글을 수차례 고쿠민신문과 그가 감독으로 있던 경성일보에 연재했고, 연재 후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경성일보에 가장 많은 글을 발표한 이가 오타니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타니는 소호의 전적인 지원 아래 아시아와 인도를 탐사하고 그 기행문을 1914년 12월부터 경성일보 제1면을 통해 2년여에 걸쳐 연재했는데, 여기서도 소호-아베-오타니로 이어지는 밀접한 인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⁵⁰

총 41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제국의 위기」 전체 글 중에 3.1운동과 조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게재되었던 총 6개의 글이다. 우선 5월 29일 자 「(22) 조선폭동」에서 조선에 폭동이 발생한

49 沈元燮, 「京城日報·毎日申報と日本仏教」, 『한일민족문제연구』 27, 2014, 233쪽.

50 沈元燮, 「京城日報·毎日申報と日本仏教」, 226~228쪽.

이유가 윌슨의 민족자결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더욱 중대한 이유로서 오타니는 최근 2~3년 동안 현저하게 증대한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흥미롭다.⁵¹ 계속해서 5월 30일자 「(23) 민족자결」에서도 조선인이 미국의 강대함과 윌슨의 명성에 기대어 지속적으로 민족자결을 주장하며 소요를 계속할 경우 미국은 필연적으로 간섭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3.1운동에서의 미국인 선교사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주의할 것을 촉구한다.⁵² 선교사들에 대한 문제는 6월 2일자 「(26) 선민을 향상시키라」에서도 재차 언급되는데, 내란을 조성하고 반역을 선한 일로서 음으로 양으로 장려한 선교사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⁵³

3.1운동의 발발을 미국과의 연관성에서 찾는 오타니의 논조는 소호의 대미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호는 러일전쟁 이후 불거진 이종편견문제와 일본이민배척 문제를 거쳐, 캘리포니아주의 배일토지법성립(1913)을 목도하며 미국을 우호와 협조의 관계가 아니라 생존경쟁적 대립관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미’적 자세는 자국의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한 국가주의에 소호를 더욱 더 투신하게 했다.⁵⁴ 소호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파리강화회의에서 윌슨 대통령이 구상한 국제연맹의 설립과 신외교 방침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그러한 신질서가 중국과 만주 등에서의 이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던 일본 정부를 구속할 수도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7월 10일자 「조선 문제와 미국의 여론」이라는 기사를 보아도 고쿠민신문의 대미 인식의 일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상원 의원 스펜서가 제출한 조선 문제 결의안에 대한 내용인데, 미국의 여론이 조선 문제에 상당히 ‘흥분’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선 문제에 관한 조선인 및 미국인의 프로파간다는 상상 외의 기세를 올리고 있어서”⁵⁵ 미국 정부 당국이 일본에

51 大谷光瑞, 「帝国の危機(二二)朝鮮暴動」, 『国民新聞』, 1919년 5월 29일, 3면.

52 大谷光瑞, 「帝国の危機(二三)民族自決」, 『国民新聞』, 1919년 5월 30일, 3면.

53 大谷光瑞, 「帝国の危機(二六)鮮民を向上せしめよ」, 『国民新聞』, 1919년 6월 2일, 3면.

54 澤田次郎, 『近代日本人のアメリカ観: 日露戦争以後を中心に』, 慶應義塾大学出版会, 1999, 68~69쪽.

55 「朝鮮問題と米の輿論」, 『国民新聞』, 1919년 7월 10일, 2면.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신문에서 보도된 스펜서의 결의안 기사를 보면, 대체로 결의안 제출 소식을 전한 다음에 미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건조하게 보도하고 있다.⁵⁶

소호도 오타니도 식민지에 문제가 있으면 제국이 존립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런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신질서 구축과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확장은 3.1운동의 발발로 이어져 제국에 위기를 초래했다. 더욱이 소호는 일본의 “조선병합은 미국의 필리핀 영유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가 있다. 가령 필리핀이 없어도 미국의 독립과 생존에는 하등 지장이 없다. 그러나 조선에 다른 세력이 거하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치명상이 아닐 수 없다. 조선병합은 제국 일본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조선의 방비는 일본의 방비이며, 조선이 없으면 일본의 독립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⁵⁷라고 말했는데,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제국의 존립을 위한 식민지 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해 오타니는 식민지에 대한 동화주의 정책을 통해 제국 일본의 강대함을 실현할 수 있다고 여겼다.

우리 민족은 한뜻으로 동화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동화의 열매는 본래 수십년의 시간을 요하므로 효과를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장애물을 설치해 영원히 다른 감정을 갖게 하면 결국 동화를 기대할 수 없다. … 동화는 지난한 일이다. 그렇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땅히 잡거 이주를 장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법으로써 행해서도, 명령을 내려 강요해서도 안 된다. 피차 노력해야 한다.⁵⁸

고쿠민신문이 3.1운동 발발 이후 정부의 동화정책에 대한 비판을 전개했던 다른 신문들과 달리 제국의 위기를 논하고 정부 옹호의 입장에 섰던

56 「朝鮮と米」, 『万朝報』, 1919년 7월 10일, 2면; 「米國と朝鮮問題」, 『東京朝日新聞』, 1919년 7월 10일, 2면.

57 徳富猪一郎, 『大戦後の世界と日本』, 726쪽.

58 大谷光瑞, 「帝國の危機 (二八) 臺鮮同化」, 『国民新聞』, 1919년 6월 4일, 3면.

것은 소호의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었다. 고쿠민신문 4월 5일 자 「내선인의 동화」라는 사실은 국민 전체가 조선 소요에 대한 철저한 해결을 위해 주도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내선인이 상호 양해, 교정, 동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과 조선의 완전한 동화를 요구했다. 이는 전술한 고마쓰의 논의에서 볼 수 있던 바였다. 더욱이 이러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피차 노력할’ 조선인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쿠민신문에는 이러한 조선인 ‘조력자’들에 관한 소식이 빈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실리고 있었는데, 이 점 또한 다른 신문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고쿠민신문 보도상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8월 25일 자 「오호라 조자작」⁵⁹은 조중응(趙重應)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친일적 행적을 상세히 소개하는 글이다. 30일에도 재차 「조중응 자작을 애도함」⁶⁰이라는 기사를 통해 그의 장례식 소식을 전한다. 11월 1일 자 「조선의 독지가」⁶¹에서는 심천풍(沈天風)의 기부소식을, 11월 18일 「일선 양민족의 양해 융화가 간요」⁶²에서는 협성구락부 대표 민원식(閔元植)의 인터뷰를, 11월 27일 「김자작 서거」⁶³에서 김성근(金聲根)의 사망 소식과 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2월 28일 자 「내선 공영주의를 역설하는 평양의 재산가-선우순」의 대형 사진기사와 같은 일자 「내선공영주의를 표방하는 선우순 씨의 활동」이라는 장문의 기사이다. 당시 다른 신문에서는 선우순(鮮于鎬)의 도쿄 방문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염두에 둘 때, 정부와 밀착한 고쿠민신문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하다.

선우순은 ‘직업적 친일분자’로 평가받을 정도로 조선총독부의 비호와 후원을 받으며 일본의 정재계의 거물급 인물과 접촉했던 인물이다. 1919년 8월부터 1921년까지 사이토 총독을 가장 많이 면회하여 식민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고, 하라 다카시(原敬) 수상에게는 동화정책의 강화를 강변

59 「嗚呼趙子」, 『國民新聞』, 1919년 8월 25일, 3면.

60 「趙重應子を弔す」, 『國民新聞』, 1919년 8월 30일, 2면.

61 「朝鮮の特志家」, 『國民新聞』, 1919년 11월 1일, 5면.

62 「日鮮兩民族の諒解融和が肝要」, 『國民新聞』, 1919년 11월 18일, 5면.

63 「金子爵逝去」, 『國民新聞』, 1919년 11월 27일, 5면.

하기도 했다. 선우순은 바로 아베 미쓰이에게 고용한 인물로 아베와 소호의 식민통치관 영향을 깊게 받은 인물이었다. 고쿠민신문은 선우순과의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우리 조선의 배일이라고 말하면 다소 어폐가 있는데, 지나, 미국 그 외의 각국이 거의 배일의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인종문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일본인이 유색인으로서는 가장 세력이 왕성하므로 이 세계의 백인들이 자연히 눈엣가시로 여기며 모두 함께 배일을 시작했던 것이다. … 원래 일한 병합은 대세에 순응한 결과이며 선인의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이다. 병합 당시는 그토록 깊이 느끼고 있지 않았다가 올봄 이래 슬슬 세계의 대세가 배일로 기울었던 상황을 타서 일한병합의 의미를 철저히 하지 않았던 선인의 일부가 동요를 시작했다. 3월 1일의 만세 소동 이래 소요는 발발하여 아직도 평온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선인으로서 냉정하게 생각할 때 독립과 자치가 과연 지금보다 선인을 유리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할지는 매우 의문이다.⁶⁴

고쿠민신문이 식민지 조선에 대해 어떠한 통치 방향을 제시했는지는 이 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소호는 황색인종으로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소호의 ‘배미’적 감정, ‘백벌’(白鬪) 타파라는 주장은 그의 공포감에 대한 표현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대전 이후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신질서의 제창과 뒤이어 발발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3.1운동은 제국의 위기의식을 환기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제국적 언론기관인⁶⁵ 고쿠민신문과 소호의 결론은 같은 황색인종의 연대를 전

64 「内鮮共栄主義を降りかざして鮮于錫氏の活動」, 『国民新聞』, 1919년 12월 28일, 5면.

65 소호는 1917년 3월 3일 고쿠민신문 9000호, ‘고쿠민신문 9천호’라는 사설에서 “오직 일본 제국을 세계에 대표하고, 일본국민을 유일한 편으로 하는 제국적 언론의 기관은, 오늘날과 같은 때에 매우 필요함을 목도한다. 우리 고쿠민신문이 미력하지만 그 뜻을 여기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소호는 고쿠민신문이 제국의 이익을 위한 ‘제국적 언론기관’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제로 하는 식민지와의 강력한 동화와 일체화, 곧 완전한 ‘내선일체’를 통한 제국의 안정이었다. 이는 앞선 오타니의 글에서도 드러났던 바이다. 선우순의 ‘내선인은 순치보차(脣齒輔車)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 민족이 서로 일치하고 서로 합체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사 말미의 언급은, 1920년 선우순의 주도로 양 민족의 공존공영을 표방한 친일단체 대동동지회의 창립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3.1운동에 대한 일본 언론의 인식 연구에서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매체 문제에 주목하고, 일본 정부와 밀착한 언론기관으로 알려진 고쿠민신문에 나타난 3.1운동에 대해 보도상의 특징, 논조의 변화는 물론 매체 전체의 성격과 그를 통해 나타나는 광의의 논조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고쿠민신문이라는 매체의 성격과 관련하여 신문을 창간한 걸출한 언론인이었던 도쿠토미 소호가 고쿠민신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입장, 보도 방향 등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보도 양상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쿠민신문은 다른 신문들과 비교해 몇 가지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다. 먼저 고쿠민신문은 축적된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당시 여타 신문들이 적시하지 못했던 3.1운동의 의미, 곧 조선인의 ‘독립’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또 지면 구성과 보도에서도 매체의 특성이 반영된 강한 여론 지도력을 의도한 측면을 보이고 있었으며,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매체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동화주의적 지배정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일본 사회에 식민지 조선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자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3.1운동이 격화되자 정부의 식민통치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한 다른 신문들과 달리, 3.1운동으로 촉발된 일본 전체의 위기를 논하는 것을 통해 직접적인 정부 비판 대신 정부 옹호의 논조를 전개했

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창된 월슨의 신질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소호는 식민지 조선의 3.1운동을 통해 제국의 위기의식을 환기하는 한편, 안정적 제국 존립을 위한 식민정책으로서 강력한 동화와 일체화를 주장했던 것이다. 즉 고쿠민신문이 소호 그 자체라고 할 만큼 그 논조에 소호의 신념과 주장이 잘 드러나고 있었던 점은 이 매체의 특성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상을 통해 이 글은 기존 연구에서 3.1운동 당시 언론 보도상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정부의 언론 '통제'와 그에 따른 동일한 논조의 기사라는 구도 외에도, 매체의 특성과 정체성 문제를 바탕으로 한 매체의 자발성 문제를 확인하고자 했다. 물론 고쿠민신문이 일관되게 친정부적 성향을 가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나, 고쿠민신문과 소호가 대미관 등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외교 노선과는 일정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었던 완전한 '내선일체'와 같은 주장은 당시 고쿠민신문만의 독특한 발상이었다.

3.1운동으로 촉발된 일본 미디어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심은 1919년 이후 식민지 통치정책과 일본 사회 내부의 여론, 일본 내지와 식민지 조선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향후 식민지 조선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일본 미디어의 반응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신문 보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층의 독자에게 수용되었는지, 이후 일본 사회에 끼친 영향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분석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의 성격에 주목하는 것은 신문의 내용분석 외에 독자층과 일본 사회의 여론 문제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추후 일본 언론의 3.1운동관, 조선인식이라는 문제를 총체적 문맥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